

일반
논문

민주적 방역, 혹은 권리 없는 자들과의 협치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례를 중심으로

이희영 _ 뉴욕주립대학교 알바니, 사회학과, 박사과정 *주저자

정다울 _ 젠더 & 섹슈얼리티 연구소 슝, 연구원

정성조 _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교신저자

논문요약

본 연구는 2020년 5월 발생한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소수자 '문제'가 한국의 생명정치적 방역 체제 내 합리성, 민주성, 시민성에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다고 주장한다. 코로나 발생 초기, 한국의 방역 체제는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 원칙에 근거한 이상적 방역 모델로 주목받았다. 그 결과 민주적 시민성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을 목표로 한 자발적 연대의 가입 여부에서 평가되곤 했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당시 성소수자들의 검사 기피 문제는 민주적 방역이 구조적으로 존재해 온 차별에 대응하는 데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심각성을 인지한 방역 당국은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과 거버넌스를 결성해 방역 위기를 해소했다. 하지만 이례적인 거버넌스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의 시민성은 방역 차원에서만 정의되었고 성(性)과 시민성의 관계에 대한 질문은 또다시 지연되고 있다.

■ **주요어:** 생명정치, 코로나19, 성소수자, 시민성, 민주주의

1. 들어가며

2020년 2월 29일 한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909명으로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 원칙에 기반한 방역 당국의 3T(trace, test, treat) 전략은¹⁾ 확진자 수를 급격하게 줄였고, 4월 한 달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33명에 그쳤다. 소위 ‘K-방역’은 UN, UNESCO, WHO와 같은 국제기구 그리고 서구 외신으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방역의 효율성뿐 아니라 민주적 방식 때문이었다. 확진자 정보 및 바이러스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국경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봉쇄가 없는 와중 이어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높은 마스크 착용률 등은 중국의 권위주의적 방식과 대조되곤 했다(Kim et al. 2020).

일일 확진자 수가 한 자리를 유지하던 2020년 5월 초, 이태원의 몇몇 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언급하였듯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으로 인해 한국의 “방역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0/05/12). 이전까지 한국의 방역 체제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이차적인 문제로 여겨졌다. 정부는 방역체계의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기조가 공동체 전체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면이 훨씬 크다고 강조해 왔다.²⁾ 하지만 역사적으로 낙인찍히고

-
- 1) 3T 전략이란 잠재적 감염자와 그 접촉자들을 추적하고(Trace), 그들에 대해 검사하고(Test), 치료하는 것(Treat)을 의미한다.
 - 2) 강경화 장관은 2020년 5월 13일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출연해 “사생활은 매우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차별받아 온 성소수자가 바로 그 개인이 되었을 때 이전과 동일한 대응은 오히려 자발적 검사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아웃팅(outing) 및 그에 따른 차별과 혐오를 걱정하는 많은 성소수자는 이태원을 방문했음에도 코로나 검사를 선뜻 받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확진자 정보 공개와 시민들의 자발성에 의존하던 K-방역 체제에서 큰 위기를 초래했다.

방역 당국 및 지자체는 위기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극복했다. 2020년 5월 9일 서울시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 접촉하였고, 10일 서울시장과 서울시 젠더특보가 유선으로 상호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11일에는 서울시 방역 당국이 성소수자 단체 관계자들과 미팅을 진행했다. 5월 12일 총 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이하 ‘대책본부’)가 출범했다.³⁾ 대책본부는 5월 15일에는 경기도 방역 당국과, 5월 19일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와 미팅을 진행하여 향후 성소수자 커뮤니티 방역에의 협조 및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했다(대책본부 2020, 7). 1990년대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시작된 이후로 최초로 성소수자 인권단체와 정부가 공식적 거버넌스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대책본부의 설립과 활동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을 배경으로 한 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 5월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례를 통해 한국의 ‘민주적’ 방역체계를 생명정치(biopolitics)로 해석한 뒤 그것이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나아가 이성애규범성을 강화하는 메커니

3) 이후 2020년 5월 16일에는 총 19개 단체, 8월 11일에는 23개 단체로 늘어났다.

음을 밝히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2020년 2월부터 구 축되어 온 한국의 방역 체제의 성격을 민주적 방역 체제로,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을 민주적 방역 체제의 위기로, 코로나19 성소수자 대책본부의 활동을 위기의 '일시적' 극복으로 본다. 그리고 왜 성소수자 '문제'가 민주 적 방역에 위기를 초래했는지, 위기가 극복된 이후에도 남은 과제는 무엇 인지에 대해서 탐구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생명정치적인 전염병 관 리하에 성소수자의 존재는 한국 사회의 합리성, 민주성, 시민성에 근본적 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분석 기간은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부터 이태원 클럽 집 단 감염이 종결된 6월까지로 한정한다.⁴⁾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정부의 공 식 자료와 대책본부가 발간한 자료로 구분된다. 2020년 2월 5일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공식 웹사이트⁵⁾를 개설하여 각종 홍보 자료, 일일 브리핑, 관련 정책 발표 등을 일원화하였다. 이 웹사이트에서 총 854건의 기자회견문, 179건의 일일 브리핑자료를 수집하여 방역 당국 의 대응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하였다. 추가적으로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K-방역 홍보자료 20건을,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50건의 대통령 및 국 무총리 담화문을 수집했다. 대책본부와 관련해서는 총 4건의 활동가 언론 인터뷰, 5건의 기자회견문, 3건의 주간 브리핑 자료, 29개의 성명문을 수

4) 방역 당국은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의 공식적 종결을 선언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27일 중대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클럽 집단 발생 관련 총 누적 환자가 6월 9일 12시 까지 집계된 277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5) <http://ncov.mohw.go.kr/>

집하였으며 지난 12월 대책본부가 발간한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 본부 백서』(2020)에서 활동 기록, 1건의 집담회 녹취록, 2건의 인터뷰 녹취록을 수집했다. 또한, 2020년 8월 22일 진행된 제12회 성소수자 인권 포럼(세션1)에서 대책본부 및 관련 활동가들의 발표문 4건을 추가로 수집했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코로나19와 방역 생명정치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서구 사회의 18세기 천연두 예방 접종을 주권적(sov^{er}ign), 규율적(discipline) 권력과 구분되는 안전장치의 예로 보았다(푸코 2011, 30). 주권 권력이 영토 내에서, 규율 권력이 개인의 신체에 행사되는 것과 달리 안전장치는 인구 전체에 행사된다(푸코 2011, 31). 안전장치의 목적은 생물학적 실체로서 인구가 유발하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상쇄하는 것이다(랩케 2015, 69). 이때 인구란 단지 사람의 수와 같은 양적 개념에 그치지 않고 출산율, 사망률처럼 특정 환경과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동시에 내재적 규칙성을 가진 유사 자연적 법칙으로서 존재한다. 규율 권력에서 전염병은 그 자체로 비정상적인 것이지만 안전의 관점에서 예측과 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발병률까지는 정상적인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통치합리성이 푸코가 『성의 역사 1』에서 언급한 “인구를 대상

으로 한 생체통제정치학(bio-politique)”(푸코 1997, 149), 즉 생명정치다. 실제로 인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염병을 예방하고 유아 사망률을 낮추고 생활조건에 개입하는 보건정책의 등장이 중요했는데, 그러한 목적으로 서구 사회에서 18세기 말부터 등장한 공중위생, 의학 내치, 사회 의학 등은 생명정치의 대표적 예시다(푸코 2011, 490).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구를 측정, 분류하고 계산, 예측하는 오늘날의 방역 체제는 다분히 생명정치적이다.

코로나19 방역 체제를 생명정치로 해석하는 국내의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생명정치를 탑다운(Top-Down) 방식의 권력으로 묘사한다(Coekelbergh 2020; Kloet et al. 2020; Kim 2021 등). 이때 정부와 방역 전문가는 방역 생명정치의 주체로, 국민은 생명정치의 대상으로 그려진다. 그 결과 생명정치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주의적 감시 체제로 환원되며(박위준 2020), 국민의 방역 참여는 권위주의적 국가에 대한 순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 K-방역의 성공에 대해서 몇몇 논자들은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국민들의 순응주의적 태도, 유교적 위계질서를 지적한 바 있다(김동택 외 2020: 84).

하지만 임동균(2020)과 천관울(2020/06/02)은 KBS와 시사IN 공동 대규모 웹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 시민들의 코로나 방역에의 자발적 참여는 유교 전통이나 국가 권위주의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수평적 개인주의에 기반한 ‘민주적 시민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설문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대개 시민적 의무감이란 공동체주의적 성향을 가리키지만, 한국의 시민성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가치 합리적 지향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이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목적으로 상호 의무적 연대를 추구한 것이다.

위 조사 결과는 K-방역을 ‘방역 생명정치’로 해석할 근거를 제공한다. 푸코가 주장한 생명정치의 통치 원리는 자유주의이다. 근대적 통치가 개인의 주권이 아니라 인구의 생명 현상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계기는 자유의 합리적 활용이다(Dean 2017). 자유를 통치에 활용한다는 것은 곧 개개인의 욕망을 인정하는 것인데(푸코 2011, 115), 욕망에 기반해서 이해한 인구는 주권에 기반한 개인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통치자에게 보여줌으로써 통치 합리성을 갱신하게 해준다(버첼 2014, 198). 자유주의 원칙에 따라서 욕망을 인정하고 과도하게 통제하지 않는 것을 통치의 원칙으로 삼을 때 인구는 새로운 자연법칙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따라서 인구의 안전을 계산하는 것은 곧 자유의 생산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다(Lemke 2019, 190). 같은 맥락에서 안전의 반대항인 위험(risk) 역시 생명정치라는 근대적 통치의 고유한 방식이다(카스텔 2014). “자유주의는 안전과 자유의 작용을 관리함으로써 개인과 집단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위험에 노출되게 해야 한다”(푸코 2012, 104). 그러므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봉쇄 대신 개방을 선택하고, 개개인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우선시하는 K-방역은 국가를 유일한 방역 주체로 둔 감시체제로 환원할 수 없으며 자유주의적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2) 생명정치와 시민사회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과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의 활동을 생명정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은 현재까지 방역과 시민사회 및 시민성의 관계에 대한 국내 논의의 지평을 넓혀준다. 기존 논의에서 시민사회는 대개 일반 시민들의 가치관과 태도를 의미하며, 이 경우 시민사회의 ‘협조’가 K-방역의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Kim & Kim 2020).⁶⁾ 방역에 대한 시민 참여는 일반적 과제로서 참여와 민주주의와 동일시되는 것이다(김창엽 2020/03/23). 하지만 방역 성공 원인으로 시민의 협조를 강조하는 것은 이끄는 국가와 따라가는 시민, 다시 말해 통치 주체로서 국가와 통치 대상으로서 시민의 이분법적 구도를 강화한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방역 참여를 국가 권력에의 포섭으로, 코로나19를 단순히 권력 확장 도구로 손쉽게 치환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정부-시민의 권력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이해하게 되면 “강제적이면서 자발적인 권력”을 설명하지 못하고, 권력이 구체적으로 조직되는 방식을 포착하기 어렵다(크룩생크 2014, 117).

반면 생명정치는 권력을 시민사회에 대한 권력이라기보다는 시민사회를 ‘통한’ 권력으로 본다. 시민사회는 근대적 생명정치의 조건이자 효과인

6) 제한적 논의는 물론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위기 상황으로 인해 개인 간 접촉이 크게 줄어드는 등 시민단체의 활동 가능성 자체가 위축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임동균 2020). 예외적으로 신진욱(2020)은 집회나 시위, 비영리 시민단체들의 활동 등 보다 전통적 의미에서 시민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위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한 바 있다.

것이다(Dean 2017; Miller and Rose 2008, 92). 시민사회란 ‘자율을 부여하는 동시에 효율적 통치’를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원리에 입각하여 통치의 과대함을 기꺼이 인정할 때 등장하는 통치 공간이다. 새로운 통치 합리성하에서 사회(적인 것)는 시민의 주권 여부로 판단되던 기존의 정치적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제2의 자연’으로서 관찰 가능한 인구 법칙들로 구성된다(렘케 2015, 82). 근대적 보건의학, 통계학, 사회과학, 사회보험 등은 정치적 주권과 관련 없이 항상 존재하는 위험의 패턴을 가시화하는 장치다. 사회속에서 시민들은 자기 자신의 안전이 곧 공동체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관념을 공유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타인과 연대한다.

크룩생크는 이처럼 시민의 결핍을 교정하려는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기획을 “시민성 테크놀로지”라고 명명하였으며, 이것이 근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통치 근간이라고 주장했다(크룩생크 2014, 23). 시민성 테크놀로지를 통해 사람들은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정보력과 책임감을 갖춘 소비자로서, 커뮤니티와 조직을 스스로 관리하는 구성원으로서, 사회운동을 민주적으로 추진하는 행위자로서,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위험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구성된다(Dean 2009, 196). 따라서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역시 단순히 국가 권력에 저항하거나 포섭되는 행위자가 아니라 국가와 마찬가지로 생명정치라는 근대적 권력 체계를 구성하는 요건이 되기도 한다(Bryant 2002). 예를 들어서 센딩과 네이만(Sending & Neymann 2006)은 여성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담론은 의도치 않게도 인구조절을 통한 발전이라는 제1세계 중심의 발전주의적 아젠다를 기존 정부 및 지식 엘리트의 영역에서 커뮤니티(지역사회) 수준의 시민사회 운동으로 전환시켰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처럼 생명정치 관점은 정부-시민단체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 두 행위자가 각각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함께 ‘통치화’되는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또 다른 통찰을 제공한다.

3. 시민성의 재구성과 ‘안전 연대’의 형성

1) 정보통신기술, 인구, 기본권

생명정치에 대한 분석은 통치 테크놀로지와 통치 합리성으로 구분된다. 이때 합리성은 사유의 양식이며 이것을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의 결합(assemblages)이 테크놀로지다(Miller and Rose 2008, 16). 통계학으로 대표되는 근대적 통치 테크놀로지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인구 현상 및 질병, 범죄의 흐름 등 그와 관련된 “진실의 체제”를 생산하여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을 지양하는 자유주의적 통치를 가능하게 했다(푸코 2012, 45). 21세기 이후 급격히 발전한 정보통신 및 빅데이터 기술은 팬데믹 상황에서 인구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추구하는 생명정치의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부상했다(Roberts 2019).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적극 활용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은 K-방역 성공의 주역으로 항상 거론되곤 한다(Kim 2021). 대표적으로 스마트 검역 시스템과 역학조사 지원 시

시스템은 효율적으로 시민 개개인을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보건·인구학적 구성 요소로 재구성한다. 시민들의 이동 경로와 시간에 대한 수집과 계산은 새로운 유형의 유사 자연법칙이 되고, 법적 의미에서의 개인과 달리 바이러스 감염 위험원으로서 개인은 인구와 항시 뗄 수 없는 존재가 된다.

하지만 기술만으로 방역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몇몇 유럽 국가는 효과적 추적의 필요성과 개인의 기본권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번번이 법적, 문화적 장애물에 부딪혔다(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20/06/26).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2020년 3월 23일 옌스 슈판(Jens Spahn) 보건부 장관이 주도하여 휴대전화 정보 활용 추적 관리안을 골자로 한 의료기관 지원법 및 감염보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시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한다는 반대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이유진 2020/04/29). 결국, 독일 정부는 2020년 6월 GPS 기반이 아닌 블루투스 기반의 위치추적 앱을 발표하고 자발적 설치를 권고하였으나, 여전히 기본권 침해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는 크고 작은 시위 역시 지속되었다.

반면에 한국은 2020년 5월 기준으로 국민의 90% 이상이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적절했다고 답할 만큼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서 관대하다(4차산업혁명위원회 2020/05/18). 그렇다면 한국의 방역정치는 어떻게 공동체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추구했을까.

2) 방역 3원칙: 시민성의 재구성

개인정보를 활용한 정보통신기술이 통치 테크놀로지라면 한국 정부가 K-방역의 원칙으로 내세운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 원칙은 통치 합리성으로서 작동하고 있다. 세 원칙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기본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는 데 일조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은 연대의 구축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자리 잡는다. 이때 연대란 자선이나 기부와 달리 상호의존적인 합리적 개인들이 집합적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다(다나카 다쿠지 2014, 208-209). 본고에서는 방역 생명정치 하에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의 안전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방역 당국에 기꺼이 제공하는 시민들의 결합을 ‘안전 연대’로 명명한다. 그렇다면 이 연대는 정말 코로나19 위험에 대항하여 ‘시민성’을 발휘한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안전 연대의 첫 번째 원칙은 투명성이다. 방역 당국은 매일 브리핑을 통해 일일 검사자 및 확진자 수, 지역사회 감염 경로, 대응조치 등 역학조사의 과정 및 대처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지역 내 확진자 동선은 긴급 재난문자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복적으로 공개되며, 시민들은 이를 통해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긴급재난문자는 2019년 3월 107개가 발송된 것과 달리 2020년 3월에는 4,403개가 발송되었다. 하루 평균 140여 개의 문자가 일괄적으로 전송된 셈이다(세계일보 2020/08/22). 그뿐만 아니라, 방역 당국은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을 통해 코로나19 연령별, 성별

감염 현황 등의 정보를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제공했다.

투명성의 가장 큰 효과는 지속적인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Strathern 2000). 문재인 대통령 역시 투명성의 원칙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평한 바 있다(문재인 2020/04/14). 그 이유는 투명성이 기술적(technical) 영역이라기보다는 극적(theatrical)이기 때문이다(Street 2012). 투명성 원칙은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제공되는 개인정보가 국가의 일방적 소유가 아니고, 시민들의 공동 소유물처럼 보이게 한다. 공공물로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탄생한다. 먼저 정보의 수집과 공개의 원칙에서 투명성은 시민들을 개인화한다. 투명성 원칙하에서 직업, 지위, 계층 등 개개인이 소유한 집단적 권력은 무의미하며, 모든 개인은 오직 역학조사의 관점에서 파악된다. 하지만 역으로 모두를 공평하게 개인화한다는 점에서 투명성 원칙은 전체화의 효과를 갖는다. 개인 정보 수집 및 제공을 거부하는 개인은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투명성 원칙을 훼손하며, 따라서 공동체의 안전 연대를 해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통치는 인구 전체와 구분되는 개인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서구 사회에서 전제되었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 대 방어하는 시민의 대립 구도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⁷⁾

두 번째 원칙은 개방성이다. 한국 정부는 과도한 입국금지나 봉쇄 대신

7)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맵/세부 동선 공개 유용성”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91.4%가 유용하다고 응답했다(동아일보 2020/05/18).

개방을 지향했다. 이는 제1차 대규모 유행 당시 중국이나 서유럽, 미국 등에서 락다운(lockdown)이나 자택 대기(shelter in place) 행정명령을 내린 것과는 대조된다. 한국은 해외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점차 유입될 때에도 해외입국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았고, 대신 의무 검사를 확대하여 인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관리했다. 2월 첫 번째 대규모 위기 당시 대구를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할 때에도 도시를 봉쇄하거나 왕래를 금지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일상에서도 외출이나 통행을 금지하는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권고하면서 물자와 인구의 바람직한 순환을(푸코 2011, 44-45) 유지하고자 했다.

도전과 위기의 순간, 한국 국민들은 담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시켰습니다. ‘이웃’을,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위험한 대상으로 여기고, 봉쇄하고 차단하는 대신,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먼저 지켰습니다(문재인 2020/05/18).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방성 원칙은 ‘자유’의 의미를 전환한다. 한국의 방역 생명정치에서 두 종류의 자유는 대치된다. 하나는 ‘마스크로부터의 자유’로 대표되는 주권자 개인으로서의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모두를 위한 자유”다. 개방성 원칙으로 인해 후자의 자유는 전염병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과 동의어가 되었다. 지역 봉쇄와 같이 개인 자유에 대한 과도한 통제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감염 위험을 산출하고 조절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위험과 자유가 상호 필수불가결한

관계가 될 때 시민 개개인은 자유롭게 존재하면서도 연합의 혜택(감염으로부터의 안전)을 누릴 수 있게 한다(에발드 2014, 300).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두를 위한 자유는 시민들의 안전 연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때 연대는 사회보험과 같은 상호 의무적 관계다(천관울 2020). 이전까지 시민의 자유가 주권자로서 헌법적 권리를 소유함으로써 가능했다면, 방역 생명정치 내에서 자유는 헌법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위험/안전을 통해 가능해진다. 즉, 자유란 위험에 대한 관리 없이 존재할 수 없고(푸코 2012, 104), 자유의 부여가 곧 통치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고든 2014, 38). 그 결과 개인정보의 수집과 제공은 자유의 침해가 아니라 자유의 필수적인 구성 요건이 된다.

세 번째, 민주성 원칙은 시민들의 방역 참여에 “연대와 협력의 민주주의”(문재인 2020/06/10)라는 가치를 부여하며, 그 결과 안전 연대는 지속성을 획득한다. 앞서 살펴본 투명성, 개방성 원칙하에서 개개인이 자신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실천하는 최소한의 행위들(개인정보 제공,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참여 등)은 나 자신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자유와 안전의 총량을 지키는 민주적 행위가 된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방역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는 새로운 민주적 시민성의 핵심적 요소가 되는 것이다(임동균 2020). 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로나 앱, 마스크 재고 앱 등을 자발적으로 개발하여 배포하는 것은 민주적 시민성의 우수 사례로 간주되어 K-방역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홍보되었다. 반면 지금까지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근본적 권리 행사 중 하나인 집회 및 결사는 위험 행위로 간주된다. 감염에 맞서는 안전 연대가 민주성의 의미를 전환시킨 것이다.

따라서 방역에 대한 적극적 참여는 국가가 시민을 감시하고 처벌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 2020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정부의 한계를 언급했다. “정부가 촘촘한 방역망을 잘 구축한다 하더라도, 은밀하게 행해지는 소모임까지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예방 백신입니다”(문재인 2020/06/03). 정부는 모든 것을 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정했고, 그 대신 시민들을 방역의 주체로 자리매김 시켰다.

이러한 비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의 또 다른 효과는 시민들을 상호 감시체제에 가두는 데 더 용이하다는 것이다(Schubert 2020). 2020년 7월부터 실시된 ‘코로나19 신고포상제’는 ‘감염자=비민주적 시민’이라는 낙인을 정당화한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실제 2020년 3월 신천지 교인 대규모 집단 감염 직후 한국리서치의 조사 결과 신천지 교인에 대한 혐오 및 차별 표현에 대해 정당하다는 응답은 63%나 되었다(한국리서치 2020/03/25).

그렇다면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민주주의적 방역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때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인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방역에 협조하는 것은 민주성의 지표로 볼 수 있는가? 다른 방식으로 질문하자면, 그러한 행위들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만들면서 창출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다음 장에서 살펴볼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례는 이러한 질문을 검토하기에 적절한 사례이다. 이 사례는 누가 ‘민주적’ 시민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한국의 방역 체제에 내재한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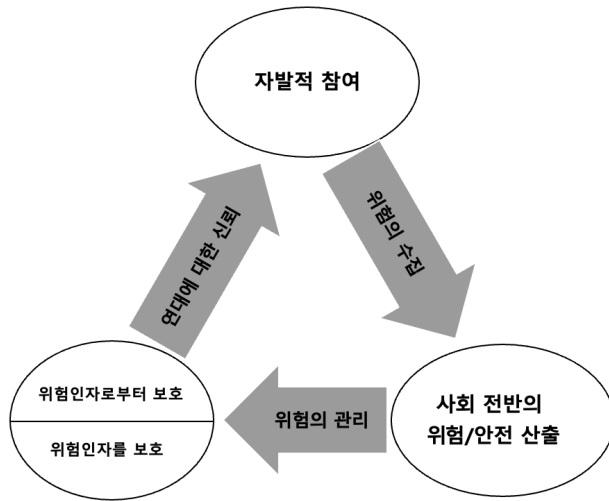
4. 방역 생명정치의 위기: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감염병의 유행 상황에서 사회구조적 약자 집단은 더 큰 타격을 받은 한 다. 성소수자는 이번 코로나19의 여파에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다. 그 취약성은 위에서 언급한 자유주의적 생명정치로서 K-방역의 성격에 기인 한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발적 으로 제공하고, 방역 당국은 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개방적인 사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안전 연대의 메커니즘으로 볼 때,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은 안전 연대의 이면을 드러냈다.

1) 차별: 안전 연대의 가입 비용 문제

첫 번째, 개방성 원칙에 근거한 ‘모두를 위한 자유’는 안전 연대를 통해 수집되고 산출된 위험 정보가 있기에 가능하다. 하지만 안전 연대에 가입 하는 비용은 존재만으로 차별받고 억압받아 온 집단에게 더 높다. 특히 벽 장(closet)이라는 특수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성소수자는 비성소수 자와 달리 아웃팅 위험이라는 크나큰 비용을 추가로 감수해야 했다. 실제로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전인 2020년 4월 20일까지 공개된 970건의 확진자 동선 공개 내용 중에서 성별, 연령, 집/직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 100%, 86.5%, 70%나 되었으며 전체 동선 공개 중 48.7%는 확진자의 내밀한 사회적 관계를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다(Jung et al. 2020). 이러한 조건은 당시 성소수자들이 처해

〈그림 1〉 코로나19 안전 연대의 선순환 과정



있던 방역 체제로 인한 아웃팅 위험이 추상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 위 상황에 더해 한국처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만연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면 모든 시민의 동선을 공정하게 제공하겠다는 투명성 원칙은 사실상 실질적인 차별로 이어진다. 이는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당시 직장에 다니는 많은 성소수자가 고용 지위 상실을 최우선 고려대상 중 하나로 꼽았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2020년 5월 9일부터 15일까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실에 접수된 상담 65건 중 자가격리 조치에 대한 일반적 문의(41건)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내용은 직장 내 아웃팅 관련 상담(10건)이었고, 검진 후 예

상되는 상황에 대한 불안, 두려움(7건)이 뒤를 이었다(대책본부 2020, 11). 당시 이태원을 방문한 한 성소수자는 최초 집단 감염이 보도된 이후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전반적 반응이 “큰일났다. 직장 다니는 애들은 끝장나겠네. … 이거 갔으면 진짜 인생 끝나는 거다. 다시 삶이 다 무너지는 거 같다 불안에 떨”었다고 전한다(대책본부 2020, 283).

세 번째, 안전 연대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공동체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위험 인자로 판명된 인구(감염자)를 각종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는 연대 전반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지속가능한 참여, 즉 민주성 원칙을 재생산한다. 하지만 성소수자들은 이 과정에서도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했다. 일례로 한 확진자 성소수자는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자연스럽게 아웃팅이 되는 등 연쇄적인 차별을 겪었다. 그는 직장에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에서 기자들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했고, “심지어 일반인이 회사에서 전화를 해서 어디 매장 직원인지, 회사 위치가 어디인지 물어보면 위치를 알려주기도” 했다(대책본부 2020, 251).

감염의 책임 귀인을 특정 집단에 귀속하고, 이를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언론은 이러한 도덕적 공황(moral panic)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언론에서는 ‘게이 째방(째질방)’, ‘게이 클럽’ 등 방역과 상관없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음란함을 부각시키고 혐오를 방조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언론중

8) 도덕적 공황이란 특정 일탈 집단의 추정 상의 위험에 대해 선정적인 보도로 사회적 낙인이 생겨나고, 공권력에 의한 공세적 조치로 이어지는 현상을 일컫는다(Cohen 1972).

재위원회가 2020년 한 해 동안 각 언론사의 차별금지 심의 기준 위반으로 시정 권고를 내린 건수는 전년도보다 12배 이상 늘어난 110건으로, 이 중에서 78건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보도였다는 점은 이를 반증한다(언론중재위원회 2021/01/28). 방역 생명정치하에서 성소수자는 “광범위한 오보, 잘못된 원인 귀착, 문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대중적 히스테리”의 대상이 되었다(뉴스바움 2015, 459).

2) 차별의 역설: 평등한 방역 vs 특별한 고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초창기부터 성소수자만이 겪는 차별 구조와 그로 인한 안전 연대로의 가입 비용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집단 감염이 보도된 다음 날 클럽 방문자 다수가 사회적 소수자라는 사실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해당 업소가 성소수자들이 특별히 출입하는 그런 업소라고 해서 다른 특별한 고려는 하고 있지 않다. ... 서울시 원칙은 시민 안전, 방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차별하거나 다른 고려를 할 상황이 아니다”(YTN 2020/05/08, 강조는 인용자). 집단 감염 초창기에 나온 이 발언은 방역 생명정치하에서 ‘차별’이라는 개념이 처하게 되는 모순을 잘 드러낸다. 한편으로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개인의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 등은 중요하지 않다. 모든 개인은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며 방역 참여에 대한 상호 의무는 누구에게나 부과된다는 점에서 공정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집단으로서 성소수자가 구조적 역압을

받아온 집단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들이 방역 과정에서 더욱 심한 차별과 혐오에 노출될 수 있다는 명백한 사실이 감춰진다.

그러나 방역 원칙과는 별개로 실제 방역 과정에서 성소수자들은 “특별한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 이태원 클럽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성소수자들은 그들이 성소수자라는 사실만으로 손쉽게 집단화되어 잠재적 위험으로 여겨졌다. 가령,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5월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태원, 논현동, 익선동이 성소수자 이동 경로이니 적극 대응해달라”고 발언했다(중앙일보 2020/05/12). 또한, 인천시는 인권재단사람을 통해서 인천 내 성소수자 및 단체 연락처를 수소문했다(인천투데이 2020/05/07). 두 사례 모두 선제적으로 성소수자 집단에게 자발적 검사를 권유하기 위함이었다. 마치 2020년 2월 1차 대규모 감염 당시 대구 신천지 교인들뿐 아니라 전국의 신천지 교인들을 대상으로 검역을 확대하고, 교인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투입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이었다. 방역 당국 입장에서 성소수자 집단은 교회처럼 주기적으로 만나는 곳이고, 성소수자 정체성은 마치 교인들처럼 특정 단체 가입 여부로 간명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것으로 상상된 것이다.

구조적 차별에 대한 고려의 부재가 무지에 의한 것만도 아니었다. 방역은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차별의 비가시화를 추구했다. 차별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방역의 걸림돌이었다. 독일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강경화 장관이 밝힌 것처럼 “한국 내에서는 성소수자와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방역을 최우선으로 설정한 현재 상

황에서 그것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역풍”을 불러온다고 판단되었다(외교부 2020/05/19). 방역 당국은 차별은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일반론적인 주장을 반복할 뿐, 누구에 대한 어떤 차별인지 되도록 언급하지 않았다. 시민들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수많은 차별 사례를 지속적으로 접했고,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어느 때보다 공감하였지만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⁹⁾

이러한 상황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었기에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당시 검사 통지를 받았지만 자발적 검사에 응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2020년 5월 11일 기준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명단은 총 5,517명이었지만 이 중 3,112명이 기피, 연락처 허위기재로 인한 연락두절 상태였다(YTN 2020/05/11). 하지만 방역 당국, 정당, 다수의 언론 등은 왜 어떤 집단은 자신의 존재를 속일 수밖에 없는지, 차별로 인해 벽장 속에 있는 성소수자들에게 진실된 고백을 요구하는 것이 왜 모순된 작업인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9)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4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를 계기로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비율은 91.1%에 달했고, 차별금지법을 포함하여 차별에 대응하는 정책의 찬성 비율은 88.5%로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았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15). 하지만 정부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5. 방역 생명정치의 임시적 거버넌스

1) 최초의 성소수자 단체-정부 거버넌스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정부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민 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 노동자와 성소수자들을 위한 시민 단체에서는 이들이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검사를 받으러 나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외교부 2020/05/19, 강경화 장관 인터뷰, 강조는 인용자).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은 한국의 방역에 생명정치의 대원칙 중 하나를 확인시킨 사례였다. 자유주의적 생명정치는 단일한 주체(이를테면 정부)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때로는 다양한 이해와 목적을 지닌 주체들이 거시적인 생명정치를 작동시키는 필수적 조건이라는 점이다(Dean 2009). 2020년 2월 신천지 교인 집단 감염 때까지만 하더라도 방역 주체로서 정부와 방역 대상으로서 위험 집단은 이분화되어 있었다. 물론 일반 시민이 참여 주체이긴 했지만, 여전히 신천지 교인으로 대표되는 위험 집단은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색출하고 통제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성소수자 집단에게 이 같은 접근법은 유효하지 않았다. 정부는 “정부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외교부 2020/05/19)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험 집단과의 거버넌스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은 정부 및 지자체와 성소수자 인권단체 간 최초의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했다.¹⁰⁾ 약 30년 전 성소수자 운동이 시작된 이후로 정부는 대체로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 침묵해 왔다. 2007년 정부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오늘날까지도 제정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라는 위기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성소수자 운동 단체를 협력적 파트너로 상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 서울시는 2020년 5월 9일부터 주요 성소수자 단체에 접촉을 시도하여 11일 공식 미팅을 가졌다. 그리고 2020년 5월 12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등 7개 단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가 출범했다. 이후 경기도와 중대본 역시 각각 15일, 19일 대책본부와 면담을 가졌다. 특히 서울시는 2020년 5월 14일부터 27일까지 “코로나19 성소수자 인권보장 및 차별 없고 안전한 검진 지원 사업”을 공식화하였고, 대책본부에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빠른 속도로 거버넌스를 확립했다(대책본부 2020, 87-88).

이처럼 신속한 공동 대응이 가능했던 이유는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오랜 기간 사회적인 차별과 낙인에 저항해 온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10) 박소영(2009)은 2003년에 보건복지부의 국고 지원을 받은 ‘사단법인한국에이즈퇴치연맹 동성애자사업부’의 무료 콘돔, 젤 배포 활동을 정부와 민간기구 간의 ‘에이즈 거버넌스’로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사단법인 내 해당 사업부를 성소수자 단체와 정부 기관 간 직접적 협력 관계로 보긴 어렵다. 반면에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의 경우 기존부터 활동해 오던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이 직접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사업을 주도하였다.

〈표 1〉 대책본부 주요 활동 내역

날짜	활동 내용
2020년 5월 7일	문화일보에서 이태원 '게이클럽' 집단 감염 보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인권 침해에 관련된 상담 2건 최초 접수
2020년 5월 9일	친구사이에서 서울시 감염병 관리과장과 미팅
2020년 5월 10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들 초동 미팅
	서울시장, 젠더특보가 각각 유선으로 협력 요청
2020년 5월 11일	초동 대응 단위 중심으로 서울시 방역 당국과 미팅
2020년 5월 12일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출범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과 홍보기획 회의 통해 공동 홍보사업 논의
2020년 5월 13일	매일경제의 기사 "[단독] 이태원 종로 남성소수자 모임 장소서 확진자 급증 정부 집합금지 명령 '구멍'"에 대한 언론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언론 모니터링 결과(1차) 발표 시작
	성소수자 커뮤니티 대상 검진 독려 광고 게시
2020년 5월 14일	2차 언론 모니터링 결과 및 "추신: 커뮤니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배포
	서울시 인권담당관과의 회의를 통해 인권 침해 상담 핫라인 개설
2020년 5월 15일	경기도 방역 당국과 미팅
	대책본부 차원에서 전화 상담 실시
2020년 5월 16일	19개 단체로 확대된 대책본부, 1차 전체회의 진행 및 1차 활동 브리핑 자료 배포
2020년 5월 19일	중대본과 미팅 진행 및 대책본부 홈페이지 개설
2020년 5월 20일	경기도 대책단장 브리핑을 통해 대책본부와의 간담회, 협력 내용에 대해 발표
2020년 5월 22일	코로나19 성소수자 인권 침해 사례 설문 실시
2020년 5월 23일	2차 활동 브리핑 자료 배포
	서울시 민관협력반에서 주최한 코로나19 대응 시민사회 집담회 참석
2020년 5월 29일	혐오 언론 순회 방역 릴레이 기자회견 및 언론중재위원회에 혐오 선동 기사 시정권고 청원
2020년 6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좌담회 참석
2020년 6월 4일	3차 활동 브리핑 배포
2020년 6월 17일	언론중재위원회 5차 시정권고 심의 결과 국민일보, 디스패치뉴스, e머니투데이 기사 각 1건에 대해서 시정권고 조치
	마지막(11차) 언론 모니터링 결과 발표
2020년 8월 11일	23개 단체로 확대된 대책본부, 6차 전체회의 진행

자료: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2020)를 재구성.

성소수자 인권단체와 국내 HIV/AIDS 인권운동은 1985년부터 격리와 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으며, AIDS 예방의 가장 효과적 전략이 인권 보장이라고 주장해 왔다.¹¹⁾ 운동의 역사를 통해 확보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과 소수자 인권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던 성소수자 운동 단체들은 2020년 2월 신천지 교인 집단 감염 때부터 위험성을 감지했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확진자가 폭증할 당시 신천지에 대한 낙인과 여론을 인지하던 상황에서 자칫 하면 성소수자들이 질병의 낙인을 받고 혐오의 집중포화를 받을 것이 자명해 보였다. 혐오와 낙인은 검진이 필요한 대상자를 음지화 할 뿐 예방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HIV/AIDS인권운동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다”(대책본부 2020, 3). 따라서 정부에게 대책본부가 성소수자 단체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였다면, 성소수자 단체에 거버넌스에의 참여는 인권운동의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다.

2) 저항과 협력의 필연적 공존

대책본부는 그간 정부가 언급하길 꺼려한 차별과 인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 논의를 주도하며 초창기 몰인권적(human right blind) 방역체제에 대해 저항했다. 저항은 주로 중대본과 지자체 등 방역 당국과 언론을 대상으로 전개되었다. 먼저 대책본부는 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중

11) 국내 AIDS 관련 주요 정책 변천에 대해서는 나영정 외(2016)를 참고

대본과 서울시, 경기도, 인권위 등에 전달하고 개선된 방안을 이끌어냈다. 대책본부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성적 지향이나 HIV를 특정하여 기저질환을 묻거나 검사하는 문제, 재난문자에 성별, 연령, 근무지 등 과도한 정보를 담아 감염인이 특정되는 문제, 아웃팅으로 인한 차별과 정신 건강 문제 등을 지적하고 익명 검사 실시, 인권 침해에 대한 지자체의 제도적 조치, 과도한 정보를 담은 재난문자의 개선 등을 건의했다. 그 결과 2020년 5월 11일부터 서울시는 익명 검사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고, 중대본 역시 5월 13일부터 익명 검사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시켰다.¹²⁾ 또한, 서울시는 5월 14일부터 인권 침해 상담 핫라인을 개설하고 경기도에서도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신속하게 경기도 인권센터와 공유하도록 조치하였다. 또 다른 결실 중 하나로 중대본은 6월 10일부터 동선 공개 기한을 2주로 제한하고, 이 기간이 지난 동선 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6월 30일 「확진 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을 통해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대책본부는 언론에 대응했다. 사실 언론은 투명한 정보 공개의 측면에서 안전 연대의 주된 주체 중 하나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이후 몇몇 언론사들은 해당 클럽이 ‘게이 클럽’이라는 것을 집중 조명했고, ‘째방’과 같이 일부 게이 하위문화의 ‘음란성’을 소재 삼아 대중적 혐오를 선동했다. 그럼에도 투명성을 방역 원칙으로 삼은 방역 당국 입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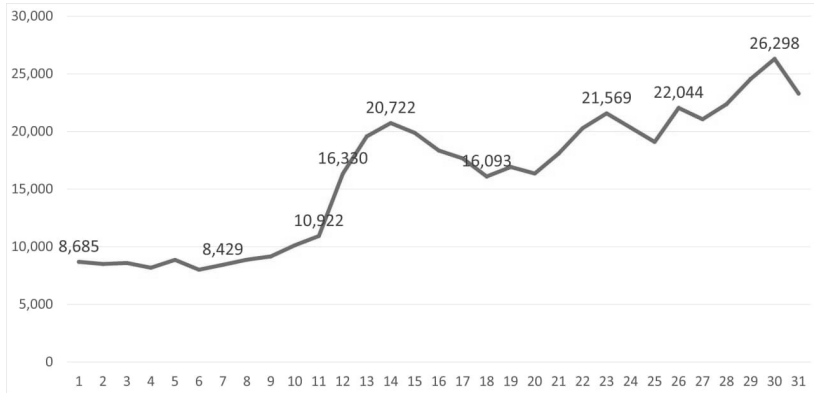
12) 그 결과 서울시의 자발적 검사 인원수는 하루 약 1,000명에서 8,000명으로 급증했다.

서 언론에 대한 적극적 제재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대책본부는 2020년 5월 13일부터 매일 자체적으로 언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적 기사를 내보낸 언론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총 11차례의 언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대책본부는 5월 29일 성소수자에 대해 ‘혐오 기사’를 작성한 대표적 언론사(국민일보, 뉴시스, 머니투데이)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기사들에 대한 시정권고를 청원했다.

위와 같은 저항 활동은 역설적으로 정부의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적극적 조치 없이 안전 연대의 선순환을 다시 도모할 수 있게 한다. 즉 저항은 전체 프로그램을 실패하게 만드는 “부정적 외재성”이라기보다 통치의 구성적 일부가 된다(O'Malley 1998: 조은주 2015에서 재인용). 거버넌스 내에서 시민단체의 저항과 협력의 경계선이 모호해진 것이다(Bryant 2002). 대책본부의 활동은 방역 주체로서 당국과 방역 대상으로서 성소수자 집단이라는, 수직적으로 이분화된 틀을 해체하는 데 일조했다. 방역 당국과 성소수자 집단의 중간에서 대책본부는 두 주체에게 서로 다른 의미를 지녔던 ‘위험’을 매개했다.

먼저 성소수자 집단에게 가장 큰 위험은 아웃팅을 포함하여 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낙인의 재생산이다. 그리고 앞서 서술한 대책본부의 비인권적 방역 체제에 대한 저항은 그 자체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게 방역에 대한 신뢰를 재고시켰다. 대책본부의 존재만으로 많은 성소수자들은 “대부분 마음이 놓인다거나,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대책본부 2020, 101). 특히 정부가 그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언론에 대한 대책본부의 대응은 성소수자

〈그림 2〉 2020년 5월 하루 검사자 수(0시 기준) 추이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일 브리핑 자료.

집단 내부에 유의미한 반향을 일으켰다. 대책본부에서 활동한 한 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메이저 언론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우리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게 들어보니까 커뮤니티에 많이 환기가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웹 커뮤니티도 초반 분위기가 험악했었는데, 대책본부가 출범하고 난 전후로 힘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래서 인권운동이 필요하구나”는 글도 올라오는 걸 봤어요. 방어를 잘 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0/07/08, 옹 활동가 인터뷰).

인권 침해와 차별의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럽게 방역 당국 입장에서의 위험, 즉 안전 연대의 붕괴와 이로 인한 자발적 검사의 감소를 해결했다. 대책본부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자발적 방역 참여를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대책본부는 서울시의 지원 기금으로 성소수자들이(특히 게이

남성) 주로 이용하는 모바일 앱 5곳, 웹페이지 1곳, 인터넷 카페 1곳에 “우리 지금 바로 검진받자. 나와 커뮤니티를 지켜요!”라는 제목으로 조기 검진 독려 광고를 게시하고 선별진료소 위치 및 운영시간, 이용방법을 홍보했다. 이들의 홍보가 유의미한 효과를 거둔 이유는 이전까지 제로섬 게임처럼 여겨지던 방역과 인권의 관계를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이다. 2020년 2월 신천지 교인 집단 감염 때와 다르게 “검진만을 목표로 한 강압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 검진을 같이 받자. 인권 침해가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는 방역 차원에서도 유효했다(코로나19타파연대 2020. 77, 나영정 활동가 인터뷰). 결과적으로 대책본부의 설립 이후 일일 검사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했다(〈그림 2〉 참고).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보도된 5월 7일 8,429명에서 2020년 5월 11일 10,922명으로 둔한 증가추세를 보이던 하루 검사자 수는 익명검사가 실시되고 대책본부가 공식 출범한 5월 12일 16,330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존재하던 차별과 코로나19 이후로 발생한 차별은 K-방역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사회의 숨겨진 사각지대”이자 “사회적으로 어둡게 가려진 부분(Dark Spot)”이었다(외교부 2020/05/19). 하지만 대책본부는 이 어둡게 가려진 부분을 밝히는 데 매개자 역할을 수행했다. 요컨대, 저항과 협력의 공존으로 인해서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방역 정치의 대상에서 주체인 동시에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6. 방역 생명정치의 효과: 성(sexuality) 없는 성소수자 논의

1) '모범적'이고 '건전한' 동성애자 만들기

일일 확진자 수가 한 자리로 줄어들었던 2020년 5월, 코로나 감염 및 자가격리는 “당신 성소수자가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 모으는 하나의 징표였다. 성소수자 개인들에게 남겨진 선택은 성소수자로서의 삶에서 최대한 멀어지는 것뿐이었다. 도덕적 공황의 표적이 된 이태원은 성소수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내는 커뮤니티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였다(한유석 2013). 그러나 차별과 혐오에 자유로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간은 이제 성소수자로서 피하고 싶은 공간이 되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으로 인해 성소수자들은 이태원에서 감염되는 것과 그 외 다른 장소에서 감염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갖는지를 경험했다(대책본부 2020, 209, 301). 그 결과 이들은 이태원이나 종로 같은 성소수자 공간과 자기 분리를 시도한다. 방역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민주적 시민이 되기 위해서 성소수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부정해야 하는 상황, 즉 “한 그룹의 시민의식이 구태여 우리(성소수자 - 인용자)의 부재로 증명되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터울 2020, 27).

방역 생명정치가 만들어내는 도덕적 공황은 성소수자 혐오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개인들이 그러한 혐오와 차별에 저항하는 대신 순응하고 숨어들게끔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일례로 자신의 성적 지향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역학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했던 한 성소수자는

결국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의 진술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한겨레 2020/10/08). 그러나 법원이 말한 손실이나 공포심의 주체(지역사회 구성원)가 분명 성소수자는 아닐 것이다. 동성애를 질병화하는 사회적 낙인에 코로나가 더해졌지만, 방역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그저 방역의 사각지대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처럼 성소수자가 코로나 상황에서 경험하는 감염과 아웃팅이라는 이중적 공포는 제대로 언어화되지도 못한 채 인구의 안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희생된다.

이것은 성소수자 집단 내부에서 모범적인 성적 규범을 생산하는 일이기도 했다. 게이 공동체에서조차 아웃팅 위험이 가장 적은 성적 행위, 실천, 문화, 외양에 안전이라는 가치가 더해진 채 정상성이 부여된다. 반면 여전히 이태원 클럽에 가는 등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존재와 행위들은 아웃팅 위험과 그로 인한 안전 연대의 붕괴라는 이중의 의미에서 위험의 대상이 된다. 방역 생명정치하에서 성소수자의 민주적 시민됨은 그들의 퀴어성(queerness)과 빠르게 교환되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에이즈 활동가이자 평론가인 더글러스 크림프(Douglas Crimp)는 에이즈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동성애자의 성적 문화가 쇠퇴하는 경향에 주목했다. 당시 일부 동성애자들은 공동체 내 ‘문란한’ 성적 문화를 도덕주의적으로 격렬히 비난하면서 ‘모범적인’ 동성애자의 삶의 양식을 개발하자고 요구했다(크림프 2021, 203).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당시 클럽은 물론 남성 동성애자들이 자유롭게 성관계를 맺는 공간인 이른바 ‘찜질방’이 보도되자 나타난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문란한’ 동성애자를 도덕적 공황으로 몰아가는 언

론 보도와 대중적 반응 사이로 이참에 ‘건전한’ 성적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적 검열에 앞서 왜 특별히 동성애자의 섹스가 문제가 되는지, 이러한 하위문화가 생겨난 사회문화적 배경은 무엇인지, ‘문란한’ 동성애라는 왜곡된 언어가 어떻게 동성애자의 삶에서 섹슈얼리티를 효과적으로 거세하는지는 질문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방역이나 사회의 안전과 교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섹슈얼리티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재배치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 자체는 제기되지 않는 것이다. 성소수자 또한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는 이처럼 성소수자의 시민됨이 갖는 조건은 물론 ‘민주적인 시민’이 지닌 성적 규범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를 질문하게끔 한다.

2) 방역 생명정치와 이성애규범성의 강화

방역 생명정치의 부수적인 효과는 이성애규범성(heteronormativity)의 강화에 있다. 이는 이를테면 ‘건전한’ 성적 문화에 대한 요구가 섹슈얼리티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에서 출발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요구가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을 통한 사회 전반의 안전이라는 실질적인 공적 가치를 위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애를 일관적이고도 특권적이게 보이게끔 하는 제도, 이해의 구조, 실천의 지향”(Berlant and Warner 1998, 548)을 의미하는 이성애규범성은 이성애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섹슈얼리티를 공적 영역에 대비되는 사적 영역에 위계적으로 배치하는 효과를 발

생시킨다(Berlant and Warner 1998, 553).

방역 생명정치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민주적 방역임을 자임한다. 2020년 5월 당시 정세균 총리는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비난은 ‘적어도 방역 관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경향신문 2020/05/10). 그러나 성소수자를 향한 도덕적 공황을 조장하고,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해체를 촉진하며, 성소수자 개인에게 성적 실천과 무관한 모범적인 시민의 모습을 요구하는 역설 또한 그러한 방역 생명정치의 작동방식이자 효과이다. 한편에서는 재난지원금, 가족돌봄휴가 등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문란한’ 성적 공동체의 친밀한 관계와 실천을 안전한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관행이 당연시된다. 이처럼 방역과 관련된 민주적 시민됨이라는 기준에 있어서 섹슈얼리티는 부재하기보다는 오히려 특정한 정상성을 획득한 채 편재한다.

이태원 집단 감염과 대책본부의 활동은 이성애규범성의 작동이란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저항이라는 단순한 구도만으로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푸코가 주장했듯 체계의 통치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은 하나의 체계가 총체로서 “인식 측면의 자의성과, 권력 측면의 폭력성” 양자에 기대어 스스로 수용 가능성을 구축해 낸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한다(푸코 2016, 69). 이때 체계 자체를 정당화하는 인식의 차원을 문제시하지 않고 권력 자체에만 저항하는 행위는 의도치 않게 법체계를 보존하는 행위의 일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폭력에 대한 비판이란 “폭력이 어떻게 사전에 구획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된다(버틀러 2016, 135). 또한, 비판이란 질문되지 않는, 이미 ‘합리성’으로 여겨지는,

자연화된 질서나 규범 자체를 문제시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는 폭력 개념에 대한 확장을 요청한다. 규율과 통치(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실제'의 폭력 장치들)는 질서를 벗어난 존재를 배제하고 처벌하는 폭력을 내재하고 있는데, 그 폭력을 '이미' 구획하고 있는 지식-권력 체계의 인식론적 폭력을 드러내고 이를 탈자연화 해야 한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문제는 방역 생명정치가 성소수자의 인권을 고려하는 데 보인 무능력만이 아니다. “개인의 욕망, 욕욕, 성적 행동이 성현상이라 불리는 지식과 정상성”의 체계 속에서 관리되고, 배제되고, 처벌되고, 심지어 죽도록 내몰리는 체계에 저항하는 것은 이들을 '이미' 체계 내의 타자로, 즉 폭력의 영역으로 배정했던 지식-권력 체계에 대한 '비판' 없이는 불가능하다(푸코 2016, 69). 대책본부의 활동에 힘입어 방역체계에 일정한 변화가 생겨나면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성소수자 공동체 내부에 집단 감염이 이어지지 않게 된 것은 분명하지만, 성소수자 집단이 한국 사회의 '위험'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 성소수자가 감염되었다고 해서 이들 집단을 방역의 '테러리스트'로 지목하게끔 하는 일련의 배치들을 문제 삼아야 하는 까닭이다(Puar 2007).

7. 나가며: 비판으로서 쿼어

이 논문은 한국의 방역 체제를 생명정치의 틀로 해석함으로써,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례가 단지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의 한 사례가 아니라 민

주적 방역을 자임하는 한국의 생명정치적 방역 체제의 성격, 나아가 성소수자 정치의 조건이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 처음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차별금지법의 핵심 근거인 ‘인권’이 오히려 개신교 우파의 보수주의적 담론 속에서 동성애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 사회가 위협에 빠진다는 주장의 근거 가치로서 전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김종우 2021).

팬데믹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성립된 정부와 성소수자 인권운동 사이의 임시적인 거버넌스, 권리 없는 자들과의 협치는 통치가 섹슈얼리티라는 문제에 어떻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다시금 경계를 유지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일 수 있다. ‘사회적 합의’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등 성소수자 관련 법안은 처리할 수 없지만, 긴급한 팬데믹 위기 속에서는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러한 이중화된 통치는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좁은 정치적 기회 구조의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방역 생명정치의 표면적인 문제들에 대한 저항을 넘어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서의 비판이 더더욱 요청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국 정부는 K-방역이 민주적 방역체제를 자임하면서, 2020년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자평을 내놓고는 했다. 그러나 K-방역이 내세운 원칙들—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은 모든 사람-시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섹슈얼리티를 사회의 안전과 재빨리 교환하는 이성애규범성의 질서 아래에서 성소수자의 시민권은 방역에 기꺼이 동참해야 하는 의무로 재구성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건은 단순히 특정한 소수 집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가시화된 사건일 뿐 아니라, 방역과 민주주의, 통치가 터하고 있는 숨겨진 전제에 도전하게끔 하는 계기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공허한 정치적 언설이, 편재하는 혐오와 차별은 눈감은 채 염불을 외듯 '사회적 합의'를 기다리는 것과 공존하는 현실은 한국 사회에서 민주성이라는 가치에 섹슈얼리티가 공백으로 남아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성(性)을 마치 무관한 것처럼 만드는 이러한 공백은 역설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이성애규범적인 섹슈얼리티의 견고함을 함의한다. '정상적인' 성적 규범에 어긋난 것으로 여겨지는 성적 주체들의 삶을 살 만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고, 나아가 폭력의 영역에 내버려 두는 통치는 과연 어떠한 민주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일까? 2020년 5월,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의 급격한 전개와 (방역 당국의 공식적인) 종식 선언 사이를 방황하며, 응답되지 못한 채 남겨진 이러한 질문은 여전히 '동등한' 시민으로 여겨지지 않는 성소수자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다~~

참고문헌

〈학술논문 및 단행본〉

고든, 콜린. 2014. "통치합리성에 관한 소개." 콜린 고든·그래엄 버첼·피터 밀러 편. 『푸코 효과』. 심성보·유진·이규원·이승철·전의령·최영찬 역. 서울: 난장. 13-84.

- 곽소영. 2009. “한국 에이즈 퇴치 운동과 게이 섹슈얼리티”. 서울대학교 여성학 협동과정 석사 학위 논문.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20/06/26. “코로나바이러스 추적 앱: 개인정보보호에 민감한 독일의 도전.”
- 국가인권위원회. 2020.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김종우. 2021.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담론 지형과 이중화된 인권: 포괄적 차별 금지법 입법 과정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129). 84-117.
- 나영정·권미란·김대희·김성연·김재왕·손문수·이훈재. 2016.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누스바움, 마사. 2015. 『혐오와 수치심: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조계원 역. 민음사.
- 다나카 다쿠지. 2014. 『빈곤과 공화국: 사회적 연대의 탄생』. 박해남 역. 문학동네.
- 램케, 토마스. 2015. 『생명정치란 무엇인가』. 심성보 역. 그린비.
- 박위준. 2020. “코로나19의 생명정치: 안전 장치와 규율의 작동으로 바라본 한국의 방역 모델과 기술의 사용.”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5-15.
- 버첼, 그래엄. 2014. “독특한 이해관계들: 시민사회, 그리고 ‘자연적 자유의 체계’를 통치하기.” 콜린 고든·그래엄 버첼·피터 밀러 편. 『푸코 효과』. 심성보·유진·이규원·이승철·전의령·최영찬 역. 난장. 179-224.
- 버틀러, 주디스. 2016. 『주디스 버틀러, 지상에서 함께 산다는 것: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유대성과 시온주의 비판』. 양효실 역. 시대의 창.
- 신진욱. 2020. “참여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한국 민주주의 연례보고서 2020』. 47-54.
- 이유진. 2020/04/29. “개인정보 보호 장벽에 막힌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앱.” 『신문과 방송』.
- 임동균. 2020. “코로나 시대의 시민사회.” 『철학과 현실』 (126). 163-180.
- 조은주. 2015. “인구의 출현과 사회적인 것의 구성.” 『경제와사회』 (105). 13-36.
- 천관울. 2020/06/02.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 의외의 응답 편.” 『시사인』.
- 카스텔, 로베르. 2014. “위험함에서 리스크로.” 콜린 고든·그래엄 버첼·피터 밀러 편. 『푸코 효과』. 심성보·유진·이규원·이승철·전의령·최영찬 역. 난장. 291-310.
- 크룩샌크, 바바라. 2014. 『시민을 발명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통치성』. 심성보 역. 갈무리.

- 크림프, 더글라스. 2021. 『애도와 투쟁: 에이즈와 퀴어 정치학에 관한 에세이들』. 김수연 역. 현실문화.
- 터울. 2020.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감정과 경험 - 그 날 그 시각 그 클럽에 있었던 한 게이 사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제12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자료집』.
- 푸코, 미셸. 1997. 『성의 역사 1』. 이규현 역. 나남.
- _____. 2011. 『안전, 영토, 인구』. 오트르망 역. 나남.
- _____. 2012.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오트르망 역. 나남.
- _____. 2016. 『비판이란 무엇인가』. 오트르망 역. 동녘.
- Berlant, Lauren and Michael Warner. 1998. “Sex in Public.” *Critical Inquiry*. 24(2). 547-566.
- Bryant, Raymond. 2002.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Governmentality: ‘Consuming’ Biodiversity and Indigenous People in the Philippines.” *Political Studies*. 50(2). 268-292.
- Coeckelbergh, Mark. 2020. “The Postdigital in Pandemic Times: A Comment on the Covid-19 Crisis and its Political Epistemologies.” *Postdigital Science and Education*. (2). 547-550.
- Cohen, Stanley. 1972. *Folk Devils & Moral Panics: The Creation of the Mods and Rockers*. London: MacGibbon & Kee.
- Dean, Mitchell. 2009. *Governmentality: Power and Rule of Modern Society*(2nd Edit). London: Sage.
- _____. 2017. “Governmentality.” Turner, Bryan(ed.). *The Wiley-Blackwell Encyclopedia of Social Theory*. MA: Wiley Blackwell. 1-2.
- Jung, Gyuwon, Hyunsoo Lee, Auk Kim and Uichin Lee. 2020. “Too Much Information: Assessing Privacy Risks of Contact Trace Data Disclosure on People with COVID-19 in South Korea.” *Frontiers in Public Health*. 8. 1-13.
- Kim, Min-Hyu, Wonhyuk Cho, Hemin Choi and Joon-Young Hur. 2020. “Assessing the South Korean Model of Emergency Management during the COVID-19

- Pandemic." *Asian Studies Review*. 44(4). 567-578
- Kim, Taekyoon and BoKyoung Kim. 2020. "Enhancing Mixed Accountability for State-society Synergy: South Korea's Responses to COVID-19 with Ambidexterity Governance." *Inter-Asia Cultural Studies*. 21(4). 533-541.
- Kim, Yeran. 2021. "Bio or Zoe?: Dilemmas of Biopolitics and Data Governmentality during COVID-19." *Cultural Studies*. 35(2-3). 370-381.
- Kloet, Jeroen., Jian Lin and Yiu Fai Chow. 2020. "'We Are Doing Better': Biopolitical Nationalism and the COVID-19 Virus in East Asia."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23(4). 635-640.
- Lemke, Thomas. 2019. *Foucault's Analysis of Modern Governmentality: A Critique of Political Reason*. NY: Verso Books.
- Miller, Peter and Nikolas Rose. 2008. *Governing the Present: Administering Economic, Social and Personal Life*. Cambridge: Polity Press.
- Puar, Jasbir. 2007. *Terrorist Assemblages: Homonationalism in Queer Times*. NC: Duke University Press.
- Roberts, Stephen. 2019. "Big Data, Algorithmic Governmentality and the Regulation of Pandemic Risk." *European Journal of Risk Regulation*. 10(1). 94-115.
- Schubert. 2020/04/01. "Crying for Repression: Populist and Democratic Biopolitics in Times of COVID-19." *Critical Legal Thinking*.
- Sending, Ole and Iver Neumann. 2006. "Governance to Governmentality: Analyzing NGOs, States, and Power."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0(3). 651-672.
- Strathern, Marilyn. 2000. "The Tyranny of Transparency."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6(3). 309-321.
- Street, Alice. 2012. "Seen by the State: Bureaucracy, Visibility and Governmentality in a Papua New Guinean Hospital." *The Australian Journal of Anthropology*. 23. 1-21.

〈미디어 자료〉

경향신문. 2020/05/10. “정총리 “특정 커뮤니티 비난, 방역에 도움 안돼”.

김창엽. 2020/03/23. “新감염병 레짐...신자유주의적 코로나19.” 프레시안.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0/05/12. “박능후 복지장관 “이태원 집단감염, 방역 시험대...차별·배제 없어야”.

동아일보. 2020/05/18. “국민 90% “코로나 확진자 정보 공개 적절”...87%, 개인정보 제공 의향”.

문재인. 2020/04/14.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모두 발언”.

_____. 2020/05/18. “73차 세계보건총회 초청연설”.

_____. 2020/06/03. “새로운 일상, 국민들께 부탁드립니다”.

_____. 2020/06/10. “제33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사”.

세계일보. 2020/08/22. “쏟아지는 재난문자 하루 평균 79건...우리가 사는 위태로운 세상”.

언론중재위원회. 2021/01/28. “언론중재위원회, 2020년 차별금지 위반관련 시정권고결정 크게 늘어”.

외교부. 2020/05/19. “강경화 장관, Deutsche Welle 인터뷰(5.14.)”.

인천투데이. 2020/05/07. “케이클럽 확진 나오자 쿼어 수소문한 인천시”.

중앙일보. 2020/05/12. “박능후 “성 소수자 이동경로 적극 대응해 달라” 발언 논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0/07/08.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 옹, 창구 인터뷰”.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2020.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백서』.

코로나19타파연대. 2020. 『시민사회 영역별 코로나19 대응활동 연구조사 보고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한겨레. 2020/10/08. “역학조사서 직업·동선 속인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실행”.

한국리서치. 2020/03/25. “코로나19를 통해 본 대한민국 시민사회와 혐오”.

4차산업혁명위원회. 2020/05/18. “[보도자료] 4차위, 대한상의-인기협과 데이터 3법 관련 공동 설문조사 시행”.

YTN. 2020/05/08. “박원순 “이태원 클럽, 성소수자 모인다고 특별 취급 않는다”.

_____. 2020/05/11. “박원순 “클럽 방문객, 익명 검사...회피하면 벌금 200만원””.

Abstract

A Democratic Response to COVID-19 or a Governance with People without Rights

The Itaewon ‘Gay Club’ Mass Infection in South Korea

Lee, Heeyoung

University at Albany, SUNY, Department of sociology, Ph.d. student

Cheong, Dawool

Gender & Sexuality Research Center, SUM, Researcher

Jung, Seong-Jo

Chun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ology, Ph.d. student

This paper argues that the sexual minority ‘problem’ in South Korean society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rationality, democracy, and definition of citizenship embedded in South Korea’s biopolitical responses to COVID-19 through the case of the Itaewon ‘gay club’ mass infection in May 2020.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COVID-19 pandemic, South Korea’s quarantine and isolation strategy was praised as an ideal model for infectious disease control that is transparent, open, and democratic. As a result, democratic citizenship became reconciled with the voluntary engagement in anti-virus solidarity. However, the Itaewon ‘gay club’ outbreak and the avoidance of COVID-19 tests among sexual minorities revealed that South Korea’s democratic disease control system could not operate properly in the face of pre-existing, systemic discrimination. Recognizing the seriousness of this situation, the government established an extraordinary governance in collaboration with LGBTQ rights groups to address the obstacles faced by the quarantine measures. Yet, this one-of-a-kind event merely defined the sexual minorities’ citizenship in terms of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the

questions regarding relationship between sexuality and citizenship continue to remain unanswered.

■ **Keywords:** Biopolitics, COVID-19, LGBTQ, Citizenship, Democracy

투고: 2021.9.3. 심사: 2021.10.13. 확정: 2021.11.2.